

# 홍 “추석전 윤 지지율 골든 크로스” vs 윤 “보수 결집 우선”

홍준표, ‘윤석열 대안’ 부상 전략  
홍 “지지율 앞서기 시작했다” 자평  
윤캠프 “보수층 믿음 주는 것 기본”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율 상승’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높다고 발표한 점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안’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홍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지지율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분위기 반전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의원은 14일 여론조사공정취회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정기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4.1%) 결과를 언급

하며 “늘 상대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나오던 조사에서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해당 여론조사 상 홍 의원 지지율은 31.4%로 윤석열 전 총장(28.5%)보다 다소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실시

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정기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9%)에서도 홍 의원은 6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7주 전 같은 조사(7월 23~24일)와 비교해 11.7%포인트(4.7%→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윤 전 총장은 26.4%로 7주 전 조사와 비교해 0.5%포인트 하락했다. 둘의 지지율 격차는 7주 전 22.2%에서 10.0%로 줄어들었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16.4%로 윤 전 총장(26.4%)과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로 두 자리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별 분류에도 윤 전 총장은 대체적으로 홍 의원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념 성향별 지지율에서 보수 지지층(윤 38.9%, 홍 24.4%), 중도 지지층(윤 20.9%, 홍 16.9%)은 윤 전 총장이 홍 의원보다 지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지지층(윤 5.6%, 홍 6.6%)은 오차범위 내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보다 다소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KSOI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응답자에게 진영별 적합도를 물으면 평소 그 사람에 대한 인물평도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선호도 있을 수 있고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여야 후보를 물으면 사람들이 대결 국면을 연상하게 돼 있다. 진영별로 점수를 주었을 때와는 또 다른 양태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 보수 지지층,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이 집중적으로 (공략) 해야 할 타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홍 의원이 일부 여론조사 상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양상을 두고 “(캠프에 위기감은) 없다. 보수층에서 믿음 주는 후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기본”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많이 낼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OI, 여론조사공정취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군사법원법 개정… 文 “軍 인권 개선 전기되길”

“정부 국방개혁 과제 마침내 결실”  
‘탄소중립법’ 후속조치 만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사망 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대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관련 성범죄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등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강한 질책과 철저한 예방 대책 마련까지 당부한 데 따른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 역시 폐지해 군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군사범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 연휴 전 국민

3600만명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이변 주종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 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 정부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 ‘실현 가능한 목표’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BTS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뒤(왼쪽부터), 제이홉, 진, 문 대통령, RM, 슈가, 지민, 정국. /뉴시스

## 文 대통령, BTS에 ‘문화특사’ 임명장 수여

지난 7월 미래·문화 특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방탄소년단(BTS)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미래·문화 특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 선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외교력 확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BTS를 미래·문화 특사로 임명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임명장까지 수여한 것이다.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미래·문화 특사 임명장 수여식에는 BTS 멤버 전원과 소속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먼저 RM(김남준), 진(김석진), 슈가(민윤기), 제이홉(정호석), 지민(박지민), 뷔(김태형), 정국(전정국) 등 BTS 멤버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어 각 멤버에게 임명장 수여 후 외교관 여권 및 만년필을 선물로 전달했다.

/최영훈 기자

## 원희룡 “교육감 추천 임명제 도입하겠다”

예산 낭비 방지·효율성 강화 방안도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사진)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추천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 통합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 전 지사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지 15년째”라며 “주변 손으로 지역 교육 책임자를 직접 뽑는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했으나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는 점이 점차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를 ‘교육의 정치화’로 꼽았다. 그는 “학교에 정치 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다”며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은 이러한 폐해를 더욱 키웠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지적

했다.

그가 내놓은 교육 정책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이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정책 두 번째 공약인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과 관련해 원 전 지사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해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 수 늘리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文 대통령 ‘캐스퍼’ 탄다… 직접 사전예약

‘광주형 일자리’서 처음 생산하는 車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 예약에 성공했다. 캐스퍼는 노·사 상생 정책 차원에서 마련한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 생산하는 차량으로, 문 대통령은 온라인 사전 예약 신청 첫날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차량 구매 예약까지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차량 예약 구매 사실을 전한 뒤 “캐스퍼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예약 구매한 경형 SUV는 ‘광주형 일자리’에 따라 설립한 공장

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부터 출고하는 자동차다. 박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책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차량 예약 구매 배경에 대해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된 차량인 만큼 응원 차원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